

社說

‘한강의 기적’, 우크라이나 교과서에서 배운다

왜 한국의 정당들은 늘 비상대책위 상태일까



시사&이슈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한반도연구소

“새 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월 지방선거 패배 직후 일찌감치 비대위 체제를 꾸렸다. 원내 123당이 정상적인 지도부 없이 모두 비대위로 당을 운영하는 조유의 사태다.” (한국경제신문, 2022.8.4.) 한국의 정당들은 예정된 주기적 선거만 치러도 늘 비상대책위 상태에 빠진다. 이에 대하여 김형준 정치평론가는 “정당이 허약하니 갈라지려 하고, 그 안에서 당직을 나눠 먹고 권력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물 중심의 정치, 투쟁 중심의 정치로 ‘정책 정당’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분석한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한국 정당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애써 외면한 진단이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불안정한 근본적 이유는 각 정당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강령이나 주장과, 그 정당 구성원들의 내심의 요구와 실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된 이후 우리 민족은 식민 종주국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점령군으로 들어온 소련과 미국 간의 협상에 의한 건국이 불가능해지자, 유엔의 권고와 선거 감독에 따라 1948년 한반도 민족사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유엔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탄생하였다.

‘인민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었던 북한 중국 소련 등 공산당 전체주의 동맹 세력은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6.25침략전쟁을 벌였다. 전쟁은 종전 조약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정전협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와 전범들을 제대로 청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전협정 이후 지난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공산당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고 정상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다. 북한 지역에 자리 잡은 공산당 세력은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한 공작을 펼쳤다. 이들은 대한민국 지역 내에 미처 청산하지 못한 남포당 잔존세력

인 토착 빨갱이들과 8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사파 등 반(反) 공화주의 세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공화주의 정치세력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갖은 공작을 펼쳤다.

반(反) 공화주의 세력이 민주공화국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정치를 하려 하니, 겉으로 내세우는 강령이나 주장과 내심의 요구와 정치적 실천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즐겨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는 자유와 공화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족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民主)’가 아니다. 이들의 민주주의는 존 스투어트 밀이 규탄했던 ‘다수의 전제’(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부정선거 등 조작을 해서라도 다수파를 만들기만 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들 삶

반(反) 공화주의 세력들은 우파정당이 공화주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교묘히 공작하였다. 흔히 ‘민주화라 부르는 대통령 직선제 제도입 이후 등장한 우파정권 핵심부와 우파정당 지도부에 주사파나 친중파들이 섞여 들어갔던 이유이다. 이회창 대표 때 측근 H 의원과 이명박 정권의 측근 L의원 등은 우파정권을 허무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들은 공천에 개입하여 우파정당을 공화주의자들이 아닌 기회주의자들의 정당으로 변질시켰다. ‘국민의힘’ 전신인 ‘국민통합당’ K 비대위원장은 2020.4.15총선에서 한사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강변하여, 조직적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의 공화주의는 미국의 공화주의를 습득하여 나라를 세운 이승만과 중산층을 육성한 박정희라는 탁월한 지도자 덕분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왼쪽) 의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미나 기자

한국 정당의 불안정, 정당 강령과 실천의 차이에서 비롯
민주의 탈을 쓴 전체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천부인권 부정

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의 탈을 쓴 전체주의로서,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체(政體)를 신(新)민주주의라고 칭한다. 국민의 자유와 천부인권(天賦人權)을 한사코 부정한다. 반(反) 공화주의 세력들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헌정주의, 법의 지배, 권력분립 원리 등 공화주의 가치가 작동하여 변형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공화주의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아야 했다. 자신들의 상대 우파정당은 기회주의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했다.

자리 잡았다. 국민은 사실상 공짜로 얻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지만 했지 공화주의의 가치는 스스로 싸워서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충분하지 못했다. 국민은 선거 때 겉으로 내세우는 말에 현혹되어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당들이 제대로 공천하고 활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하도록 강제할 책무가 있다. 사회계약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뜻을 대표하지 않는 정당에게 주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공화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노력만 큼 커진다.

스카이&망

노태우정부 퇴임 직후 한 신문사가 기가 막힌 만평을 보도한 일이 있다. 진수성찬을 즐긴 손님들이 “잘 먹었다”고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며 식당을 나가는 뒤에서 종업원이 “참 지지분하게도 쳐 먹었네!” 하는 한 컷짜리 만평이었다. 부정 부패로 얼룩졌던 6공화국 초대 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만평이라 오래오래 회자했다. 훗날 시위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퇴임 하자마자 각종 비위가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게 마치 노태우 정권 퇴임 직후 상황과 기시감이 들 정도로 비슷하다. 노 정권 때는 수사사건 등 산처럼 쌓인 대통령 차원의 비리가 다수 불거져 경찰과 검찰이 바빴다. 문 정권 퇴임 이후엔 안보·인권·외교·산업 등 여러 방면의 부적절한 정책이 연일 불거져 언론과 검경을 바쁘게 하고 있다. 문 정부는 취임 직후 첫 번째 한 일이

위원회공화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사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일자리 통계를 체크하겠다고 며 요란하게 출범했지만 ‘정부 예산으로 만든 임시직 노인 일자리’ 이외엔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결국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준 문 정부의 대표적인 속임수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대통령 소속 12개 △국무총리 소속 14개 △각 부처 소속 92개 등 행정기관위원회 118개를 신설했다. 기존 위원회까지 합치면 622개에 달한다. 지자체 위원회도 2020년 현재 2만8071개나 된다. ‘위원회 공화국’으

로 불릴 만하다. 118개 중 현재 남아 있는 111개(7개 폐지)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회의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곳(14.4%)이다. 111개 중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48개 위원회의 올 예산은 총 645억3900만원이다. 하지만 111개 중 67개의 위원회는 4분기 중 1개 분기에선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8개 위원회는 아직 인적 구성조차 안 된 상태다. 대부분 있으나마나 한 유명실 위원회라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밝힌 대로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 감축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없애려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까딱하다간 ‘위원회 감축을 위한 위원회’만 하나 더 생길 상황이다. 눈 부릅뜨고 주시해 보겠다. 조정진 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 상당 부분이 초도화된 우크라이나가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6.25 전쟁 이후 이뤄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일컫는 표현인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고교 정규 교과서에 소개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삭제됐던 우리의 경제발전, 왜곡된 6.25 전쟁 묘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대로 교육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 학생들은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조차 모른 채 자라고 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육과 학부는 한국 발전상을 교과서에 신도록 10학년(한국 고교 2학년) ‘세계지리’, 11학년 ‘세계역사’ 교육 과정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내년 9월 가을학기부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가 수업에 활용된다.

기존 우크라이나 교과서 가이드라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국·일본·인도 관련 내용만 규정했지만 내년 9월부터 처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 한국 관련 내용 비중도 다른 아시아 3개국과 동등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변경된 10학년 세계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은 싱가포르·홍콩·도쿄·두바이·상하이와 함께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로 소개된다. 부산은 아시아 최대 항구 중 하나로 지도에 표시된다. 학생들은 ‘세계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 ‘수출 지향적 경제 모델’ ‘특화 산업’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공부하고 평가받는다. 탐구학습 연구 주제로는 ‘한국 경제발전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제시된다. 11학년 세계역사 가이드라인은 한국 발전상·민주화 경험·경제 기적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신도록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한국 발전 내용을 담은 9학년 지리 교과서가 올해 처음 정식 교재로 선정됐다. 하지만 전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교육 일선에 배포되지 못하고 있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일

부 인쇄비용을 지원했지만 워낙 예산이 부족해 배포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정작 한국에서는 관련 내용이 사라지고 편향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문 정부가 2018년 자행한 교과서 개악 때문에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로 바뀌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용어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도 11종 가운데 4종(천재교과서·금성·비상교육·김영사)에 불과했다.

2025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도 문 정부 시절 꾸려진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이어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 교육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은 오래전 민주화를 이뤘으며 문화 강국으로 떠오르는 반면, 세계 최빈국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 독재국가지만 교육 현장

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전쟁 전인 지난해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에 한국 관련 내용 게재를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을 배울 필요성에 공감해 교과서 게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은 우크라이나 국민 사이에 일고 있는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이후 국가 재건 모델로 유럽 선진국과 함께 한국을 꼽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7월 발표한 재건 계획에도 ‘기업친화적인 제도 개선’ 관련 한국이 주요 사례로 포함됐다. 문 정부 때 모조리 삭제되거나 왜곡된 내용들이다.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OECD “韓경제, 회복 속도는 늦고 불확실성은 크다”

‘회복 속도는 늦고 불확실성은 크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다 본 내년 우리 경제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 2.5%에서 2.2%로 내려잡았다. 6월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7%에서 2.5%로 0.2%p 하향조정했는데, 이를 다시 2.2%로 0.3%p나 낮춰잡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교역조건은 나빠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불가상승 압력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는 진단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삼각파도가 뉴 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경제는 당장 내년부터 성장세가 한층 더 꺾일 것이라는 경고다. 북

이날 ‘강통 전세’가 늘고 있는 데서 보듯 강력한 경기 고음이 울리고 있다.

설상가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패(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 조강제가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대를 돌파하고 있다. 기업들은 높은 환율에 따른 수입 원부자재 값 폭등과 환차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앞선 데 덮여 9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 번 물가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준금리를 1%p 인상하는 울트라스트림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현재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인데 다시 우리보다 높아질 개연성이 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두 번(10월·11월) 남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연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했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누구보다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862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면 2200조원을 웃돈다.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규제 혁파와 첨단기술 확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힘 쓸 때다. 글로벌 파고를 넘는 산업경쟁력 제고로 미증유의 국난 극복 기회로 삼는 실천적 의지가 요청된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초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어 금리 인상 카드만 쓸 수도 없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고물가 못지않은 또 다른 리스크는 집값 급락과 급증한 가계부채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민간 소비도 함께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2.5%에서 2.2%로 하향조정
물가 대응 韓銀 기준금리 인상 조건… 후유증 커
규제 혁파·첨단 기술·산·학·연 협력체계로 극복을